

사회적 경제로서의 마을학교: 자급자족 원리의 제도화를 위하여

김동택(서강대)

이 글의 목적은 최근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마을학교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정
치경제적 제도화와 그 제도를 구성하는 원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를 통해 마을
만들기 전체로 문제의식을 확장하는데 있다. 도시에서 마을은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가 수렴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한국에서 마을학교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수렴될 여지가 가장 높은
영역이다. 즉 마을학교는 마을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도 많은 교육프로그램이 마을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그것의 현실성, 지속가능
성, 그리고 사회적 의미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글은 마을
학교가 지속성을 갖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적 경제의 형태로 제도화되
어야하며, 그것의 중심적인 원리는 경제인류학적인 의미에서의 가정 경제 혹은 공동
체 경제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회적 경제로서의 가정경제의 원리는 사용을 위한 생산이며, 이것은 다른 경제
제도들 즉 시장, 호혜, 재분배와 같은 제도들과 차별적이면서도 그것들과 연결될 수
있는 독자적인 경제제도이다. 마을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마을 주민들이 만든 마을
학교는 사용을 위한 생산이라는 원리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마을학교는 구성원들은 물론 공교육,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연결을 통해 교육의 본
래 목적을 실현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마을학교, 제도화, 사회적 경제, 자급자족, 가정경제, 사용을 위한 생산

1. 들어가며

이 글의 목적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마을살이의 맥락 속에서 마을학교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갖는 사회적 경제로서의 함의, 원리를 검토하는데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첩되는 문제 영역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마을이라는 공간적 맥락이며 다른 하나는 마을학교의 지속성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로서의 맥락이다. 이 글은 마을학교가 등장하는 사회적 맥락, 그것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구성 원리를 모색하는 순서로 전개될 것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던 한국의 마을들은 근대 이후 전쟁, 중앙집권화, 산업화, 도시화를 겪으면서 급속하게 그 성격이 바뀌었다. 특히 대도시들은 한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고 있는 토박이들 보다는 교육, 일자리, 주거비용 등 필요에 따라 들고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 되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들고나는 이동성이 높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하기는 대단히 힘들다.

하지만 지역은 선거와 같은 주요한 정치적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이다. 또한 가구 중심의 일상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지방정부의 재정을 이루는 지방세가 부여되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초등과 중등에 이르기까지의 의무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은 사람들의 필요 혹은 상황에 따라 선택된다는 이동성과 삶의 중요한 부분이 특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고정성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 게다가 한국의 주거 공간은 부동산 가격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경제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지역 자체가 경제적으로 이미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원하는 것과 실제로 제공되는 공공재 사이에는 심각한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는 이러한 간극을 줄이고 이동성이 높은 거주 지역을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안정된 공간, 즉 마을로 만들려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마을은 전통적인 친족중심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해체된, 이동성을 특성으로 하는 산업 사회에서 거주민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자신들의 거주 공간을 안정된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서의 특정한 지역을 의미한다. 아울러 그렇게 만들어진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마을살이라고 규정한다.

한국의 역사에서 마을 만들기는 전통적인 마을들이 본격적으로 해체되었던 산업화 시기인 60년대와 70년대에 마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된 위로부터의 정책인 새마을 운동과 대조적으로 1987년 민주화 운동이 만들어낸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만들어낸 마을 만들기 운동이 있다. 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의 하나로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되었고, 1995년 지방선거가 도입되었으며, 1999년 동사무소들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일련의 변화 과정이 일어났고,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재생, 도시재생, 농촌의 특성화 마을 만들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또 다른 맥락에서 신자유주의의 급격한 확대로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시장과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일자리 창출, 아이 돌보기, 필요한 학습프로그램제공,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 등등 다양한 의제를 제시하면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이 등장했는데, 이때 사는 공간을 중심으로 등장한 것이 마을 만들기 운동이다(유창복 2010, 31-32). 따라서 현재의 마을 만들기는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려는 움직임, 중앙 및 지방 정부에 의한 지원과 아래로부터의 자발성, 사회적 경제의 창출과 풀뿌리 민주주의와 같은 복합적

인 의제들이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1990년대 이래 시민단체인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가 중심이 되어 만든 1993년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1996년 인사동 거리 조성, 1996년 부평문화거리가 시작되었고 1993년 자발적인 돌봄을 위해 만들어진 성미산 육아공동체, 1996년 부산 희망 세상의 지역공동체 방송, 1997년 대구 YMCA의 삼덕동 골목 가꾸기 등 다양한 주제영역과 공간에서 마을 만들기가 등장했다(김은희 2012, 20-21). 이런 흐름은 중앙과 지방 정부의 마을 만들기 정책으로 가속화되어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정부의 주도로 13개의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가 공식 운영 중이며 설립을 준비 중인 곳도 5개가 있다(마을 만들기 전국네트워크 2012, 279쪽). 특히 서울시는 2012년 3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공포하고 ‘주민주도’의 35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2012년 8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사단법인 마을’이 당시 진행 중이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례를 주민주도·민관협력으로 범주화하여 정리한 것을 보면 약 92개의 사례가 실려 있다.¹⁾

서울시의 마을들을 그것이 추구하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구분해보면, 공동육아공동체로 시작하여 대안학교, 문화공간, 마을기업들을 갖춘 종합적인 마을공동체²⁾들, 달동네를 공동체로 만들려는 주거 재생 사업형 공동체,³⁾ 문화학교, 장터, 도서관을 갖춘 아파트형 공동체,⁴⁾ 대형마트에 대응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문화예술공간과 관광지로 만들어 지역공동체의 거점이 된 사례,⁵⁾ 다양한 장터운영과 사회 기부형 마을들,⁶⁾ 마을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학교, 에너지 마을로 거

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4992

2) 마포구 성미산 마을, 강북구 삼각산재미난마을, 성대골 마을이 있다.

3) 성북구 장수마을, 은평구 산새마을들이 있다.

4) 성북구 길음뉴타운 임대아파트 단지, 송파구 파크리오 아파트 등이 있다.

5) 금천구의 남문시장, 종로구의 통인시장, 강북구의 수유마을시장이 있다

듣나고 있는 공동체⁷⁾, 빈 공간을 활용한 ‘마을텃밭’공동체들이 있다.

서울의 마을을 공간적으로 구분해보면 북쪽의 은평, 성북, 강북, 노원구가 비교적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대표적 마을공동체로 알려진 성미산 마을을 포함하는 마포구, 서울 중심부의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에서도 비교적 활발한 마을공동체들이 존재한다. 용산구, 성동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에도 지역 특성을 살린 활발한 마을 공동체 설립이 이뤄지고 있다. 아파트 단지인 강동, 송파, 강서구는 아파트 단위로 마을이 조직돼 있다. 이에 따르면 강남구를 제외하면 하나 이상의 마을공동체를 갖고 있다.⁸⁾

마을은 이처럼 특정한 필요의 영역과 특정한 공간이 결합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특정한 필요 영역이 강조될 수도 있고 특정한 공간이 강조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을이라는 명칭이 가능하려면 특정한 공간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자발적인 마을 만들기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결합된 마을 만들기는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2년부터 마을 만들기가 ‘정책과제’가 되었고, 민관협력 형태의 마을 만들기가 추진 중에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지역 활동가 교육 및 양성, 마을사례 발굴, 씨앗뿌리기 사업이다. 특히 서울시는 2014년부터 마을학교 지원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부 혹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보다는 일단 지역민들이 주도하는 마

6) 영등포구 달시장, 금천구 무지개 벼룩시장, 구로구 오류골 어울림 벼룩시장, 강동구 자마장 나눔장터 등이 있다

7) 동작구 성대골 마을이 대표적이다. 2010년 10월 개관한 성대골어린이도서관을 시작으로, 지난 4월에는 방과후 대안학교인 성대골마을학교가 문을 열었다. 에너지 자립 마을을 꿈꾸며 '성대골절전소' 운동도 벌이고 있다. 2000년 대조초등학교 어머니회와 지역 주민들이 어린이 도서관 설치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은평구 마을n도서관은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가 하면, 지난해 8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인 '작공'을 운영하고 있다.

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4992

을 만들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에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더 해지면 상대적으로 마을 만들기가 수월해지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인 정부나 지자체 주도의 마을 만들기는 당사자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이상, 그 지속성에 있어서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민간의 영역에서건 정부·지자체에서건 마을이 오늘날처럼 뜨거운 문제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것은 정부 행정력의 결여와 신자유주의적 논리의 확대로 인해 의·식·주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은 물론이고 교육, 문화와 같은 삶의 질과 관련된 영역들에서 기존의 제도들이 더 이상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마을을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 마을 만들기 연구회 2013; 김영선 이경란 외 2014).

물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경계를 갖는 고정적인 장소 혹은 공간이 필요하지는 않다. 공간 보다는 필요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의 피해와 정부 행정력의 실패를 해결하고자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은 사회적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을 만들기는 스스로의 삶에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 가운데서도 특정한 공간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하지만 마을 만들기 운동들, 이 단계가 지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든 마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원, 인적자원, 조직 등 많은 것이 부족하거나 불균형한 상태이다. 심지어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자 구성원의 동의를 가장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돌봄이나 교육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인 마을인 성미산 마을의 경우 공동육아라는 돌봄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방과 후 학교와 다양한 자발적 배움터의 운영, 그리고 대안학교 설립

으로까지 이어졌지만 여전히 공교육과 사교육과의 관계설정, 대안교육(홈스쿨링, 대안학교)의 지속가능성, 누가 교육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학습과 진로문제, 최종학교 졸업 후에도 필요한 다양한 배움의 요구 충족, 재취업이나 취미활동 등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김영선 이정란 2014, 160-199).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마포 내의 다른 마을들,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유사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

이 글은 마을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영역들 가운데서도 특히 배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한국 사회에서 교육 문제는 구성원들의 필요가 집약될 수 있는 의제이다. 대표적인 마을 만들기 돌봄에서 시작되어 배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만큼 지속적인 마을살이에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성원들이 점차 성장하면서 최종학교 졸업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마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돌봄과 배움 프로그램의 제도화된 결합을 ‘마을학교’라고 규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성립 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마을 학교는 정부의 공교육이나 시장의 사교육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었다는 의미에서 사회적이다. 이 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지속성을 갖는 제도가 되어야한다는 의미에서 제도, 그것도 경제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할 것이다. 즉 마을학교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재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제도화를 통해 가능하며 그 제도를 구성하는 원리는 경제인류학적으로 가정경제라 불리는 사용을 위한 생산이라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2. 마을학교의 제도적 원리: 경제 인류학적 접근

1) 마을과 교육, 마을학교

대표적인 초기 마을들은 돌봄 공동체로부터 비롯되었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배움터,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대안학교로 발전하고 있다. 성미산마을(유창복 2010, 31-32)이나 삼각산재미난마을⁹⁾이 모두 그러한 경로를 걷고 있다. 성미산이나 삼각산과 같은 마을들의 형성 초기 단계에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의 활동이 만들어지는 것은 마을 학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2014년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청별 마을학교 선정 지원사업도 넓은 의미에서 마을학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 문제는 마을공동체의 형성에서 대단히 중요한 고리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누리과정, 무상급식, 9시 등교 등에 대한 논쟁과 정책갈등에서 보듯이 교육문제의 저변에는 한국사회의 열악한 현실이 존재한다. 공공적인 돌봄 체계가 턱없이 미비한 상황, 대학 진학이 배움의 목적이 되어 대학 진학 가능성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교육, 대학진학에서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교육포기와 학생들 스스로의 학습 포기, 대학 진학에 소비되는 엄청난 사교육비, 교육 이후의 취업난 및 불안정한 고용 구조가 악순환을 낳고 있다. 돌봄과 교육 제도에 대한 불신은 결국 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대학 정원 감소와 이에 따른 교육 제도의 혼란이라는 또 다른 악순환을 낳고 있다.¹⁰⁾

⁹⁾ <http://blog.naver.com/informk/30144268305>

¹⁰⁾ 최근 교육부의 대학특성화 사업은 입학정원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을 기본적인

더구나 마을에서 이뤄지는 배움을 낳게 한 원인 가운데 하나인 공교육의 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다. 특목고 및 자사고가 만들어낸 교육계층화 문제, 상대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고의 붕괴가 광범위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마을형 결합 학교¹¹⁾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마을 만들기와 연결된 공교육, 학생들이 삶을 영위하는 마을과 더불어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구상인데, 아직 구체화되는 않았지만 분명 사람들의 삶이 이뤄지는 마을과 더불어 교육이 행해져야 한국 교육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판단된다.

여러 마을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마다 다양한 배움의 과정들을 만들고 있다. 돌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성격에 따라 학습 성취를 강조하는 교과형과 취미 내지 특성을 살리는 비교과형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또 최종학교를 졸업한 청장년 그리고 노년층에게도 계속되는 교육프로그램, 이른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을 배움터와는 일정한 괴리가 존재한다. 한국에서 평생교육이란 교육기본법 제3조에 따른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와 헌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주로 학점은행, 평생직업교육, 성인문해교육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¹¹⁾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323&bbsBean.bbsSeq=5>

다루는데, 주로 독학사 및 직업교육에 특화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전통적 학교제도에 대한 의문에서 제기되어 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언제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평생교육의 본래 의미, 즉 1972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유아에서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친 교육”이란 의미로 사용한다.¹²⁾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한국의 평생교육법에 따라 개설되는데 그 현황을 살펴보면 구에 따라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가 상당히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울시 산하 평생교육기관은 구청별로 평균 39.6개가 있으며, 구청별로 연 평균 개설되는 프로그램도 1,391개 정도이고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연 인원은 구청별로 286,421명 정도이다.

〈표 1〉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수

구분	기관수			프로그램수			수강인원		
	개수	순위	%	개수	순위	%	명	순위	%
1위 자치구	60	1	6.1	2,805	1	8.1	514,844	1	7.2
서울시 평균	39.6		4.0	1,380.9		4.0	286,421.9		4.0
서울시 전체	989		100	34,522		100	7,160,547		100

(출처: 서울통계, 기준: 2010.11)

마을 만들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마포구의 경우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총 수강인원은 196,210명으로 서울시 평균 286,421.9명 보다 90,211명이 적어 20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주민 84.2%가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마포구 교육발전 종합계획수립 연

¹²⁾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2496&cid=42126&categoryId=42126>

구' 2013) 참여 의사와 실제 참여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 준다.

〈표 2〉 평생교육 필요성 인식정도

구분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별로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전체
명(%)	179(37.1)	227(47.1)	56(11.6)	10(2.1)	10(2.1)	482(100)

(출처: '마포구 교육발전 종합계획수립 연구' 2013)

왜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시간적 여유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 정보의 부족, 관심 있는 교육과정의 부재, 경제적 문제, 근접한 교육기관 부재, 기타 순이었다.

〈표 3〉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구분	명	비율(%)
시간적 여유가 부족	68	38.4
교육 안내 및 정보 부재	29	16.4
관심 있는 교육 과정 부재	22	12.4
경제적 문제	18	10.2
근접한 교육기관 부재	14	7.9
기타	26	14.7

(출처: '마포구 교육발전 종합계획수립 연구' 2013)

이는 대부분의 제도화된 평생 교육이 주로 학점은행, 평생 직업 교육, 성인 문해 교육 등 학위, 취직을 위한 자격증, 최소한의 문자해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구청별로 제도화된 평생교육기관들이 아니라 주민마을센터나 마을 도서관 등에서 일상적인 취

미 활동, 문화나 예술 활동, 혹은 인문학 강좌 등을 개설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돌봄,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과 교과 및 비교과 교육,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교과 및 비교과 교육, 대학생 이상을 위한 다양한 비교과 활동, 성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미, 문화, 예술 활동 등은 제도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평생교육의 본래 의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위, 자격증에 초점을 둔 교육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애주기에 걸쳐 일상적으로 요구되거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교육프로그램이 늘 존재해야하는 것이다.

마을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은 앞서 지적된 평생교육을 받는데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시간이 없다거나, 교육정보가 없다거나, 필요한 교육이 없다거나, 경제적 문제, 근접성 모두 교육이 자신들이 사는 마을에서 제공된다면 상당한 정도로 쉽게 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교육 프로그램들이 단순히 개별 주민들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만들고 마을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다양한 단체와 마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마을 만들기의 모범사례로 평가되는 성미산마을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교육을 진행하는 단위가 영세하여 정부 보조 등에 의존하여 유지되는 문제가 있고, 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다보니 지역별로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 품앗이나 자원봉사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 교사의 비전문성 문제가 제기되며 이에 따른 참여율의 악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 인력 및 기존 교사들의 재교육프로그램 부족을 경험하게 되고 심화된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배움을 담당하는 단위들의 열악한 재정상황이다. 열악한 재정은 앞서 지적한 많은 문제점들을 반

복해서 만들어낸다. 그리고 돌봄으로부터 시작된 교육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성장과 마을의 활성화에 따라 확장되었지만 특히 청장년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마을배움@네트워크 판 운영위원회 2014, 54-72)

현재의 상황에서 마을 배움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영세성을 극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안정적 제공, 교육자 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심화교육과정개발, 안정된 재정 확보 등이 요구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공교육의 문제점을 마을 배움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있다. 즉 본래 마을에서 돌봄과 배움이 성장하게 된 배경인 공교육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는데도 마을에서의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제시한 일반고 전성시대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주목하고 있는 마을형 결합학교의 실현에도, 신뢰할 만하고 안정적인 마을 배움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마을 배움의 제도화된 형태를 마을 학교라 부를 것이다.¹³⁾

하나의 사례로서, 마을학교가 주체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 마포지역에서는 마을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의 상황 파악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시도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특정한 공간 즉 마포라는

¹³⁾ 이러한 문제점은 마을학교라는 개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마을학교는 마을 내에서 생애 주기에 걸쳐 다양한 주제영역을 포괄하는 교육을 누릴 수 있는 제도화된 네트워크이다. 단일한 교육기관이 이 모든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고, 분산된 교육 프로그램은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낳기 때문에, 마을학교는 생애주기와 다양한 관심 영역을 포괄하는 부분들을 갖는 네트워크로서 그리고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 자율성을 지닌 지원 조직(혹은 허브조직)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 즉 마을 학교는 다양한 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의 네트워크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허브조직으로 구성된다.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배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들이 서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프로그램 단체들 간의 소통부재), 참여하고 싶은 사람과 프로그램간의 정보소통이 원활하지 않고(사용자와 공급자간의 정보 소통 부재),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다른 마을들로 확장되기 힘들고, 서로 협력하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학점 공유제와 같은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문제들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마을학교가 성립하기 위한 최저한의 요구사항으로 프로그램 정보 소통, 제한된 자원 최적화가 가능한 터미널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나아가 마을 교육의 결과물이 개인한테 축적되지 않고 마을의 자원으로 축적될 필요성 즉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단순한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마을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체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는데 이는 협동조합에서도 늘 발생하는 문제이다. 또 개별 단체 하나가 해결할 수 없는 횡적인 상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또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생기는 피로감 축적, 각 단체들이 당면한 자기 일들을 챙기기도 힘든 상황 등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 각 단체, 마을, 마을학교, 지역사회들이 모여있는 교육 생태계, 즉 배움을 열쇠말로 안정적인 마을 생태계를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¹⁴⁾

마을 만들기에는 삶의 터전인 주거 문제, 가게들이 모여 있는 상업지구에서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 추진되는 마을 만들기, 마을이 생산의 근거지가 되는 마을기업 등 다양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도시의 마을이

¹⁴⁾ <http://cafe.daum.net/networkpan>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해관계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이 정착되는 것인데, 배움을 화두로 전개되는 활동들, 마을학교로 명명된 활동이 마을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교육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민고 말길 만한 돌봄 시설, 초등 방과 후 시설, 사람들의 자아를 성장시킬 배움터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마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핵심적인 과제는 그것이 질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을은 그 자체가 사회의 일부이다. 따라서 마을의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마을학교 또한 하나의 사회의 일부여야 한다. 여기서 사회는 하나의 체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체제로서 마을학교는 그 자체로서 안정적인 재생산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터하고 있는 마을이나 다른 마을들의 일부로서 그것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의 작동방식, 원리는 제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마을학교의 질적 우수성과 지속 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이하에서는 마을학교의 제도화 방식 및 그것의 원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사회적 경제와 마을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에서 칼 폴라니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모종의 경제를 갖지 못한다면 그 어떤 사회도 단 한순간 존속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칼 폴라니 2009, 180). 폴라니의 말대로 마을은 어떤 경제를 갖지 못한다면 단 한순간 존속할 수 없다. 마을은 시장이 통제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에 대한 거부로 등장했다. 또한 마을은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거나 앓는 재화를 스스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

다. 마을은 따라서 그 자체로 어떤 경제이어야 하는데, 국가와 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마을은 사회적 경제와 연결된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는 정부의 재정도 아니고 시장의 이윤도 아닌 사회적 가치를 담당하는 제도(charter of Social Economy 1996) 혹은 “일정한 형태의 사회 권력의 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조직되고 통제되는 경제활동”(E. O. 라이트 2012, 273)으로 규정된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는 사회 자체의 존재, 좋은 사회, 산업화에 따른 대응을 위한 결사체 경제와 관련되어 있다(장원봉 2007, 8-10). 유럽의 역사에서 19세기 중반 이후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의 확장에 대응하여 공제조합, 농협과 신협, 소비자협동조합과 노동자협동조합의 형태로 발전해왔다. 20세기 내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되다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사회적 경제의 전통적인 제도인 조합에 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실현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2년 유럽연합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헌장이 채택되었다(Social Economy Charter 2002)¹⁵⁾ 사회적 경제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는데, 시장경제의 부정을 대체하는 급진적 사회전략으로서 해방적 의미에 주목하거나, 국가의 실패를 보완하는 고용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 주목하거나 신자유주의의 동원전략으로 그에 포섭된 것이라는 비판적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장원봉 2006, 50).

그런데 사회적 경제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들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주목적으로 내세우면서도 사회적 가치에 대해 시장이 아닌 것, 정부가 아닌 것 등 Not A, Not B의 방식으로 설명한다. 사회적 경제가

¹⁵⁾ <http://www.socialeconomy.eu.org>

C라고 할 경우 Not A, Not B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C 자체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를 설명하면, 사회적 경제는 명확한 자기규정을 갖지 못한 실체, 무엇 무엇을 제외한 그 무엇이라는 잔여적인 의미구조로 존재하거나 여러 역사적 경험의 집합이라는 의미만을 갖게 될 뿐, 자체의 구성 원리는 갖지 못하게 된다.

사회적 경제가 스스로의 구성 원리를 갖기 위해서는 폴라니가 설명했던 역사적 경제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폴라니는 자유주의 사회이론을 부정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던 경제 체제들을 분석하고 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인류역사에서 실제 혹은 실체로서 존재해 본 적이 없음을 밝히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인간의 경제 제도들은 역사적으로 늘 사회와 함께 사회와 연계되어 존재해왔으며, 반면 시장 경제는 인간 사회 전체를 시장의 부속품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역설한다.

“여러 시장에 의해 통제되는 경제란 우리시대 이전의 그 어떤 때에도, 심지어 원리 차원에서나마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K. 폴라니 2009, 180). 오랜 인간 역사에서 시장이 아닌 다양한 경제제도들이 존재해왔는데 그것들은 바로 호혜, 재분배 그리고 가정경제의 원리였다(K. 폴라니 2009, 187). 호혜의 원리는 상호성이나 대칭성의 제도로 소선물, 증여, 교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해왔다. 그것은 태평양의 섬들 사이의 무역, 섬 내부의 부족 및 친족 사이들에서 이뤄지는 선물경제, 북아메리카 인디언들 사이의 교환 제도에 널리 존재했던 경제 형태이다. 재분배의 원리는 중심성의 제도화로 중심적인 권력이 있어서 구성원들로부터 생산물의 일부를 걷고 그것을 비축한 다음 다시 재분배하는 과정을 통해 경제가 유지된다. 전 근대의 관료적 제국들 피라미드의 이집트, 바빌로니아 제국, 중국, 유럽의 봉건제가 모두 재분배

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체제들이다. 심지어 자유주의 경제학의 대표로 간주되는 아담 스미스가 오히려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정부의 우위로 재배치되지 않는 이상 정부의 재분배 경제는 시장에 의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G. 아리기 2009, 72-74)는 점을 우려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베버 또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초역사적 특성을 거부하면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다양한 경제제도들을 연구했다. 그는 동아시아 전통 체제를 황제나 왕권을 중심으로 권력과 재화를 분배하는 가산제로 규정한 바 있는데, 한국의 전근대 사회들에서도 재분배는 핵심적인 경제 원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정치체제의 정당성은 재분배 활동의 적절함에 의해 획득된다. 그런데 이 역사적 경제제도들은 사회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늘 복합적 형태로 존재하며, 다만 기본적인 구성원리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회의 역사적 성격이 규정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경제제도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 혹은 사회와 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인간의 삶과 사회를 중심으로 존재했던 경제 제도의 역사가 한꺼번에 뒤집히는 상황이 초래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19세기에 본격화된 자기-조정적인 시장 경제의 출현이다. 플라니는 시장경제란 실제로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지만 유명처럼 우리 시대를 뒤덮고 있는 존재로 규정한다. 시장경제는 판매를 위한 생산, 만물의 상품화, 자본의 자기증식과정을 원리로 삼아 만들어졌다. 시장은 판매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의 획득을 위해 모든 인간 제도들을 그것의 부속품으로 전략시키는 악마의 맷돌이다. 이러한 원리가 사회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구축된 것은 전체 인류의 역사에서 19세기 중반, 이른바 자본의 시대였다(E. 홉스봄 1998).

20세기 중반에 파시즘, 공산주의, 뉴딜과 같은 재분배영역이 등장했

던 것은 바로 시장의 독재에 대응하여 사회가 나름의 방식으로 저항 하된 결과였다. 21세기인 현재의 시점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것 또한 20세기 후반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확장된 자기 조정적 시장경제가 초래한 파멸적 결과 때문일 것이다. 자유주의 경제하에서 이뤄지는 모든 생산 활동은 이윤을 획득 하기 위한 것으로 그것의 작동을 위해 인간과 자연을 부속물로 전락 시키는 까닭에,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그만큼 황폐화된다는 뜻이다. 사회의 유지를 위해 국가는 시장의 팽창을 완화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개입해 왔다. 영국의 구빈법이나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뉴딜이나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그러한 사례들이다. 하지만 정부들은 국내외적인 권력의 배치에 따라 시장의 위협을 받거나 시장이 남긴 문제점들을 처리하는 정도의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유럽의 사회적 경제는 19세기 이래로 주로 협동조합의 형태로 시장과 국가의 영역이 아닌 그 무엇으로 간주되는 잔여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최근 사회적 경제의 의미가 확장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범주가 추가되었지만 사회적 기업은 한편으로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과 결합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가 방기한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중간한 영역에 놓이게 된다.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은 사회적 경제들의 이런 문제점들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가하면, 전혀 새로운 경제 원리를 가질 수 있다. 마을은 이윤이나 재분배가 아닌 어떤 것, 즉 두 경제 원리의 잔여적인 것이 아닌 그 자체의 구성 원리를 가정 경제에서 찾을 수 있다. 마을은 가정과 마찬가지로 공간적으로 일정한 범위를 갖고 있으며, 필요에 의한 생산이라는 자급자족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가정경제

의 원리와 유사하다. 이 글의 주제인 마을 학교도 마을 구성원들의 사용을 위해 마을 구성원들이 만든 것이다. 그것은 국가의 재분배에 경제도 기업의 이윤을 위한 사교육도 아니다. 본래적 의미에서 자급자족 경제가 그렇듯 마을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제도나 네트워크는 그 특성상 공간적으로 일정한 범위를 갖는 구성원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며 필요를 충족시키는 생산 또한 마을에 의해 제공된다. 즉 마을 경제의 원리는 경제인류학적으로 폴라니가 가정경제의 원리라고 불렀던, 사용을 위한 생산이라는 특징을 갖는다(K. 폴라니 2009, 196).

본래 경제Economy의 어원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생산한다는 가정 경제oconomia, 즉 가정운영의 기술에서 비롯되었다. 자급자족 경제는 생산력이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발전이 있고난 다음에야 가능한 복합적인 사회체제이다. 그리고 가정경제의 원리가 실현되는 규모는 본래적인 의미의 가정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 장원, 제국에 이르기까지 공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가정이나 제국처럼 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성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하고 저장한다는 점에서 구성 원리는 동일하다(K. 폴라니 2009, 195). 또 가정경제는 재분배나 호혜와 같은 경제제도들과 연결될 때, 보다 안정적인 제도로 존재할 수 있다(K. 폴라니 2009, 187). 로마와 같은 대 제국도 무역과 조세라는 중요한 경제 제도가 있었지만, 그것이 터하고 있는 기본적인 경제 원리는 가정경제였다. 무역과 재정은 가정경제 즉 사용을 위한 생산을 보조하는 제도로 활용되었다. 또한 가정경제는 로마의 파밀리아(familia)처럼 전제적일 수도, 남슬라브족의 자드루가(Zadruga)처럼 민주적일 수도 있다.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가정경제를 중요한 제도로 강조했던 이론들은 동서양을 통해 다양하게 존재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가정경제를 바람직한 사회체제라고 강조했다(K. 폴라니 2009,

197).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익을 위한 생산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사용을 위한 생산이야말로 고유한 의미에서의 가정 경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가정경제가 시장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강조했다. 가정경제가 시장에 팔기 위해 부수적으로 생산하는 경우라도 본래 농장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산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돈을 바꾸어 오는 환금 작물이 된다고 해도 가정 경제의 자급자족 원리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쓰고 남은 것들을, 혹은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생산 판매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가정 경제 행위의 기초를 반드시 파괴할 이유는 없다(K. 폴라니 2009, 197).

경제 원리로서의 가정 경제는 지금은 살림살이의 영역으로 축소되었으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지배적인 경제 원리였고 재분배나 호혜와 더불어 경제를 구성하는 주요한 원리였다. 브로텔은 살림살이 경제에 주목하여 자본주의를 재규정하려고 시도했다. 근대경제제도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물질문명의 영역,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 국가와 이윤이 독점적으로 결합한 자본의 영역으로 구성된 3층 구조로 이루어졌고,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는 3층, 독점의 영역에 속한다(F. 브로텔 1995, 12-13).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본질적 제도로 규정되는 시장은 근대적 독점과는 상관없이 늘 존재해왔다. 근대에 들어와 국가 형성과 더불어 권력과 결합한 자본의 영역이 독점을 형성하고 그것이 시장과 생활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에 따르면 물질문명은 폴라니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했던 사용을 위한 생산, 가정 경제의 영역이며,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투명한 교환의 영역이다. 그리고 자본은 이 둘을 바탕으로 이윤을 발생시키는 독점의 영역이다. 폴라니의 방식으로 브로텔을 언급하자면 ‘악마의 멧돌’은 독점의 영역이며, 생활 세계와 시장에 종속되어야 할 영역이다. 하지만 단순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물질문명의 풍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사용을 위한 생

산을 원리로 이뤄지는 가정경제는 공간의 범위를 확장하면 마을이나 공동체의 원리가 된다. 마을 경제는 역사적으로 고대제국, 봉건제, 부족, 가족 등으로 존재했던 가정 경제의 범주들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을 위한 경제제도로써 가정경제는 상호성, 재분배의 원리와 더불어 어떤 사회를 전일적으로 지배하지 않으면서 그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 (K. 플라니 2009, 208-209).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마을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데에는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해, 필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성원들이 직접 무엇인가를 했고 또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돌봄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전형적으로 자급자족, 즉 사용을 위한 생산이라는 원리에 적합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마을은 사회적 경제의 공간적 실현이며, 특히 마을 학교는 시장이나 국가가 지배하는 경제가 아닌 사회, 가족,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마을이라는 특정한 공간을 매개로 형성된 사회적 생산물이자 제도라고 할 수 있다.

3) 마을학교의 제도화 원리: 자급자족

필요에 따른 생산 활동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의 제도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이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원리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마을 구성원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도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한다면 제도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마을학교를 추구하는 움직임들이 어떻게 하나의 제도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사회적 경제들인 협동조합, 공제조합 그리고 사회적 기업 등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위한 생산을 담당하는 경제

제도들인데 이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목적만으로 생산하지는 않는다.

다른 한편 마을 만들기에서 호혜와 연대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정관영 2013, 207) 경제 제도로써 호혜는 선물, 증여, 교환, 교역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을 향해 있고 동시에 또는 비동시적으로 그것이 언젠가 자신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경제제도는 일단 하부 단위의 자족성이 갖춰진 다음에 성립될 수 있다. 연대는 필요 충족을 위해 혹은 서로의 공동 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여기에서도 일단 하부 단위의 자족성이 갖춰진 다음에 성립될 수 있다.

게다가 호혜와 연대에서 교환은 반드시 등가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적 가치, 위상, 자존심을 위해 특정한 생산물을 교환하거나 나누는 것이다. 마을학교의 경우 교사와 학생이 호혜의 원리에 의해 그리고 교사와 교사가 연대의 원리에 의해 유지될 수 있는데,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대신 지식이나 사랑을 나누며 교사와 교사는 연대의 원리에 의해 협력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학교와 학교는 연대의 원리에 의해 협력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교사와 학생 그리고 단위들이 자족적이지 못할 경우 호혜와 연대의 기반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일종의 교환 경제인 호혜와 연대는 서로가 필요한 것을 나눌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호혜의 원리에 의해 필요한 것이 아닐 경우에도 교환이 이뤄질 수는 있지만 서로의 이해가 계속해서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호혜 원리의 작동은 한쪽에게 장기적으로 불만을 주고 따라서 유지되기 힘들다. 연대의 원리도 공동의 목적을 위해 서로 돕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대칭성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어서 한쪽의 결정에 따라 다른 한쪽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호혜나 연대는 일

단 독립된 단위들이 충분히 자족적인 다음에 작동할 수 있는 제도로써 관계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호혜와 연대는 관계를 이루는 단위 즉 스스로의 사용을 위해 생산을 하고 그것을 통해 유지되는 자족적인 단위들을 전제로 한다. 자족적인 단위들 간의 호혜와 연대는 자족적 단위들이 스스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약간 부족하거나 약간 남을 경우에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자족성이 부재할 경우 전체 네트워크가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재분배의 경제 또한 마을 운영의 기본 원리로는 적합하지 않다. 어떤 위임받은 단체, 대표가 집중적으로 자원을 통제하고 재분배하는 것은 일상적인 경제 제도에서 과도한 힘의 집중을 초래한다.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각자가 내는 부담금은 사용을 위한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당 집단과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특정한 집단이 그것을 위임받아 제도를 작동하는 것이 일상화된다면 마을학교는 소수의 자원분배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불가피하게 위계적인 제도가 될 경향성을 갖게 된다. 물론 재분배는 긴급한 상황,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을 대비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마을 학교의 지속성과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에 의한 생산, 즉 가정경제 혹은 공동체 경제의 원리에 입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마을학교는 마을 구성원들의 필요에 의해 마을구성원들 스스로 교육을 공급하는 자급자족의 원리를 바탕으로 설립 운영되고 여기에 호혜와 재분배 원리가 덧붙여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재분배 경제 원리인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금, 다른 마을 학교나 교육 네트워크와의 호혜, 공교육과의 협력 등은 언제나 활용 가능한 자원들이다. 하지만 마을학교를 구성하는 기본 경제 원리는 언제나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생산한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럴 경우에만 마을은 유지될 수 있고 그것에 필요한 부수적인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마을학교가 만드는 생산물은 구성원들에 의해 지역 화폐나 품앗이를 통해 혹은 일반적인 화폐로 소비될 수 있다. 소비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할 권리에 관한 것이다. 생산과 소비는 어떤 경제제도 하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특정한 경제 제도를 구성하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마을학교가 공동체 경제, 마을을 기반으로 마을의 필요에 의해 생산되는 한, 소비 또한 마을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가장 우선적으로 소비할 권리가 마을구성원들에게 주어지고 마을 구성원들 내부에서도 마을살이에 가장 적극적인 구성원들에게 최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마을학교는 마을이란 공동체가 필요에 의해 생산하는 재화인 만큼 적절한 평가를 통해 마을과 마을학교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소비할 권한이 주어지고 또 소비에 드는 비용도 달리 책정할 수 있다. 개방성과 구성원의 사용이라는 원칙이 충돌할 때, 공동체의 사용을 위한 생산이라는 기본 원리로 돌아가 구성원의 사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은 특권이나 폐쇄성이 아니라 마을 구성의 원리와 관련된 문제이다. 마을 구성원이 아닌 경우,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가정을 위해 생산하고 남은 물건을 시장에 팔아도 가정경제 자체의 근거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경제를 더욱 윤택하게 하는데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을 학교라는 생산물을 소비하는데 차이를 두는 것은 마을학교가 공동체 경제 원리에 바탕을 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하며 다른 교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그러해야 한다. 즉 공동체 경제는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생산하는 경제지만 필요할 경우 판매를 함으로써 공동체 경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마을의 구성원들은 필요에 따라 학교를 만들고 학교가 만든 프로그램을 소비하되 마을 일의 참여 정도에 따라 비용에도 차이가 주어질

수 있다. 매우 열심히 구성된과 그렇지 못한 구성원, 마을이 만들어낸 재화의 사용만을 목표로 구성원이 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른바 free rider의 문제이다. 무임승차를 배제하는 부정적인 방법보다는 마을활동에 기여한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긍정적인 방식이 더 생산적이다. 이때 기여도에 대한 판단 근거는 관련 단위나 마을 전체의 평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의 정도와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혹은 지역신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따로 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효율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화폐나 신용제도를 기반으로 부가적인 마을 자체의 방법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사용을 위한 생산 활동에 기여한 구성원들에게는 그만큼의 합당한 혜택이 주어져야한다는 것이다.

마을의 필요에 따른 자체적인 생산 활동이 이뤄진 다음, 마을 내부의 관련 단위들과 마을 외부의 관련 단위들은 호혜와 연대의 정신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환하거나 단순한 소비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적합한 비용 지불 방식이 정해질 것이다. 외부의 단위나 개별적인 소비자들이 마을학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 경우 이를 소비하기 위해 구성원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름으로써 학교의 안정적인 재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마을학교가 취약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부분이 강한 다른 마을학교와 서로 프로그램을 교환할 수 있다. 이때에 그것이 동일한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마을학교라면 상호성, 호혜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시장논리에 의해 비용을 지불하거나 혹은 비용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을학교가 비용 책정과 유보금을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인가는 가정경제의 원리 위에서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결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이상훈, 2008: 174),

마을학교는 학생들을 시장에 적합한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무한 경

쟁으로 내모는 시장과 대학 진학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그에 적합한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계층화시키는 공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화된 사교육에 맡길 경우 그것 자체가 사회의 계층화를 반영하고 또 재생산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마을학교는 가정경제로서 공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확장된 사회성은 정부의 교육이 공교육이라는 관념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마을의 교육프로그램들이 완결성을 갖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들 간의 연결이 매우 중요하다. 마을 배움이 활성화된 곳에서는 배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활동가들 혹은 공급자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의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마을 만들기 초기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최근 교육 프로그램의 공급과잉은 중앙정부, 지자체의 지원에 의한 강좌 개설이 활발해지면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재정 투입이 중단되는 순간 프로그램도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기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마을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의 학교 개념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성미산마을의 경우 배움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포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 정보를 구성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소통체계를 만들고, 프로그램 운영 단위들의 상호 협의에 의해 프로그램의 최적화된 배치 및 조정, 하나의 단위가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의 공동기획 및 실행, 가르치는 사람이 곧 배우는 사람이 되고 배우는 사람이 곧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의 실행, 배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양질의 재교육프로그램제공 등을 준비하고 있다(마포 동네소식 2014).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가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화,

그것도 자체적인 재생산을 목표로 한, 사회적 경제 제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정보의 소통, 마을과 마을들 간의 정보 소통, 공동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자들의 재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그를 통해 안정된 재정구조를 갖춘 사회적 경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마을 교육지원센터와 같은 기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을학교들은 스스로의 자립을 기반으로 서로의 네트워크를 통해, 그리고 다른 사회적 경제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되는 전국적인 규모의 마을 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튼튼한 생태계를 가진 경제제도로서의 마을학교는 공교육을 떠받치고 재사회화시킬 수 있는 모델이자 지원 기관이 될 수 있는데, 그 예로서 초등학교 돌봄의 외부 위탁 나아가 초중고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정규교과까지도 마을 학교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을 위한 생산’이라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가정경제의 원리는 마을학교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강력한 개념 그리고 제도가 될 수 있다. 마을 학교가 마을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안정된 돌봄과 배움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것은 생태적인 맥락에서 걸을 수 있는 거리 내에 존재할 필요가 있다. 배움의 내용면에서는 마을의 필요에 따라 생애주기에 입각하거나 특화된 주제들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마을학교는 교육 과정에서 그것이 미래의 마을 구성원들을 교육하는 것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마을학교 교육에서 마을 자체가 훌륭한 교육의 장이다. 다양한 사회적 경제들, 활동 현장을 체험하고 학습하며 이해하는 것은 젊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진로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을학교들은 마을 만들기의 경험 자체를 교과과정으로 사용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마을을 근거로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게 된다. 마을이 젊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것은 배움의 세대단절을 의미하는데, 마을 구성원들의 생애주기에서 특정 세대가 교육에서 단절된다는 것은 마을의 취약함을 강화시킬 수 있다. 마을에서 사회적 경제를 보고, 배우고, 그것으로부터 삶을 이어갈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을학교 교육이 체계화된다면 그 마을이 갖는 가정 경제의 완성도는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 마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사회적 경제들은 자발적인 것부터 정부나 신자유주의의 초국가기구들이 지원하는 것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협동조합이 이윤의 논리에 빠져들게 되거나 생존전략의 한 방식으로 불가피하게 친환경 경농업을 선택하거나 정부 지원을 얻기 위해 성과 위주의 경영을 한다는 비판(김홍주 2008, 26), 또 협동조합이 사회적 가치가 아니라 개별화된 소비자들의 웰빙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김찬호 2008, 146). 한국의 사회적 기업들 가운데 이익을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벌써 ‘사회적 경제의 영리화’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김성현 2008). 이는 사회적 경제조차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흡수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주성수 외 2008, 58).

비슷한 맥락에서 마을 만들기와 같은 지역운동에 대한 비판도 제기

되고 있다. 가장 극단적인 평가는 특정한 지역의 변화를 사회의 변화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유럽의 지역운동에 대해 “풀뿌리라는 것이...‘체제의 풀뿌리’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재영 2008), 사회적 경제의 한 형태인 협동조합은 마르크스가 비판했던 것처럼 “유토피아적 공동체에 불과”하다는 비판(곽노완 2006, 73), 신자유주의의 초국가기구인 세계은행(World Bank)이 사회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통합적인 발전 모델(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아래로부터의 “자활적 에너지를 국제금융공동체의 신자유주의적 규범으로 흡수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비판한다(김성현 2008). 이러한 우려는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활동가들도 표명하고 있다. 돌봄, 교육, 문화, 생협 등 마을의 주요한 사회적 경제 활동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지만 회원으로서가 아니라 소비자로 활동하는 구성원들이 대부분이라는 비판적 언급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김영선 이경란 2014, 174).

그럼에도 도시, 세계로 확대되기 이전에 마을 자체는 서로의 내부를 알 수 있는 인격적 관계로 형성되며, 그것은 확실한 제도가 만들어질 때 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된다. 마을은 관계의 긴밀성이란 측면에서 서로를 잘 알 수 있는데(위성남 2014, 77) 이는 폴라니가 생산관계에서 내면조망이라 부른, 생산을 담당하는 인간들이 그 과정에서 서로의 욕구와 고통 그리고 노고를 경험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폴라니, 2002: 106).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마을과 같이 범위의 한계를 갖는 단위는 곧 장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마을학교는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에 연계된 학교이다. 교육을 중시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마을에서의 배움은 삶의 변화가 발생하는 모든 부분이 얽혀있는 관계망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마을학교는 경험적으로 계획이나 기획이 아니라 마을 자체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왔다. 마을

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갖는 제도로서의 의미는 자급자족의 원리인 가정경제이다. 그리고 가정경제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사회적 경제의 일부이자 핵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도시의 마을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생산한다는 것은 마을이 단순한 취향의 네트워크 혹은 취미 생활의 장이 아님을 뜻한다. 물론 그렇다고 현재의 시점에서 마을 자체가 하나의 생활 공동체라고 할 수도 없다. 다만 교육이라는 문제 영역을 놓고 보았을 때, 그것은 인적 자원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시장 경쟁을 떠받치는 인간을 양성하는 근대 학교의 경계를 넘어서 삶의 기본, 행복 추구,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적절한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 결과 적절한 마을 구성원들을 만들고 그런 구성원들을 가진 마을은 다시 마을학교의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최소한 마을학교의 영역에서 마을은 사회적 경제 제도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학교가 시장과 국가가 실패한 부분에 대한 보완물인지, 대체물인지, 더 나아가 대안으로서 간주될 수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만들어낼 성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신자유주의라는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의심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대신할 마땅한 대안도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마을학교는 마을 만들기에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이며, 그에 필요한 제도적 원리를 확립하는 것은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현실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014년 10월 6일 접수, 10월 28일 심사완료, 11월 11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곽노완. 2006. “21세기 대안사회의 경제철학”. 『철학연구』 제100호.
- 김성현. 2008. “국제금융기구와 빈곤축소프로그램”. 『한국유럽학회 학술회의 자료집』
- 김영선 이경란 외. 2014. 『마을로 간 인문학』. 당대
- 김찬호. 2008. “iCOOP 생협 10년의 사회문화적 의미”. iCOOP생협연대 지음. 『협동 생활의 윤리: iCOOP생협 10년사』. 도서출판 푸른나무.
- 이상훈. 2008. “iCOOP생협 사업에 대한 경영평가”. 『협동 생활의 윤리: iCOOP생협 10년사』. 도서출판 푸른나무.
- 다정환 사무소와 마을배움@네트워크 판. 2014. 『마포 동네소식』 준비 2호
- 마을 만들기 전국네트워크 편. 2012. 『마을 만들기 전국네트워크 보고서』.
- 마을배움@네트워크 판 운영위원회 2014. 『마을로 간 인문학』. 당대
- 생활정치연구소. 2013. 『마포구 교육발전 종합계획수립 연구』. 마포구
- 위성남. 2014. “마을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마을로 간 인문학』. 당대
- 유창복. 2010. 『우리는 마을에서 논다』. 또 하나의 문화
- 이재영. 2008. “풀뿌리는 기만이다”. 『시민사회신문』 제 49호.
- 장원봉. 2006.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 집.
- 장원봉. 2007.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 『시민사회와 NGO』. 제5권2호.
- 정관영. 2013. 『이제는 사회적 경제다』. 공동체
- 주성수. 2008. “사회경제. 시민사회. 제3섹터. 비영리섹터”. 『제 38차 시민사회 연구회 발제문』.
- 한국마을만들기 연구회. 2013. 『우리. 마을 만들기』. 나무도시
- E. 올린 라이트. 권화연 역. 2012. 『리얼 유토피아: 좋은 사회를 향한 진지한 대화』. 들녘.
- E. 홉스봄. 정도영 역. 1998. 『자본의 시대』. 한길사.
- Economic and Employment Summit in Quebec. 1996. Charter of Social Economy.

- F. 브로델. 주경철 옮김. 1995. 『자본주의와 물질문명』. I -1. 까치
- G. 아리기. 강진아 옮김. 2009.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 도서출판 길
- K. 폴라니. 홍기빈 옮김. 2009.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적 기원』. 도서출판 길
- K. 폴라니. 홍기빈 옮김. 2002.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 책세상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323&bbsBean.bsSeq=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4992

<http://cafe.daum.net/networkpan>

<http://www.socialeconomy.eu.org>

<http://blog.naver.com/informk/30144268305>

Community School as A Social Economy

Dong-Taek Kim

This article pursues the possibilities of sustainable community school through building principle of socio-economic model. In doing that, it also pursues the possibilities of community building. Community in city is made of individual's interests different from county communities and traditional communities. In Korea, education is crucial issue which every household's interest is integrated. Therefore, building and maintaining community school is key of making community.

Although there are lots of education programs in the city communities, its sustainability, reality and social role are still not clear and controversy is still on going. This article argues that, to become a sustainable institution, community school should be a form of social economy, and its basic principle should be house-hold economy as a form of self-sufficient economy.

Education is a key issue, integrated interests of many people in Korea. Community can produce education program which community needs and wants. When community provides education what community most need, based on self sufficient principle, community school could be a model of alternative economy model which substitutes prevailing neoliberal education and traditional state centered education model.

Key words: community school, institutionalization, social economy, self-sufficiency. production for use.